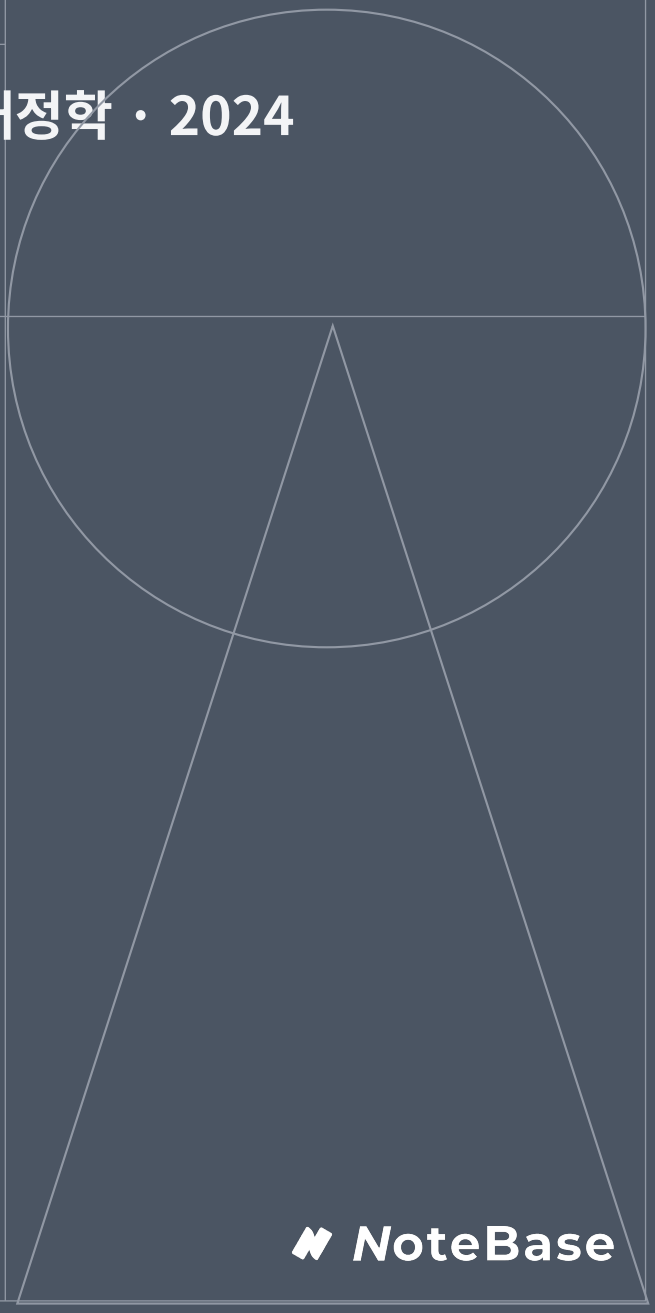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재정학 · 2024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재정학 · 2024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재정학 · 2024

문 1. 파레토 최적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어느 한 사람의 경제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한 사람 이상의 후생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상태

② 경제적 선택의 변화를 통해 모든 사람의 후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상태

③ 어느 한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의 후생 감소가 불가피한 상태

④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파레토 최적은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는 추가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누군가를 더 낫게 만들려면 다른 누군가의 후생을 희생해야 한다.

개념 구분

판단 기준: 파레토 개선은 다른 누구의 후생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변화이다. 파레토 최적은 실현 가능한 자원배분 중에서 **이러한 개선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최적상태의 의미: 어떤 사람의 후생을 높이려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후생을 낮추어야 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최대한 만족한다거나 후생 수준이 서로 같다는 뜻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 없이 추가로 개선할 여지가 없다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기준이다.

다른 설명과의 구별: ①은 다른 사람의 후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밝히지 않았으므로 단순한 후생 증가만으로 최적상태를 정의할 수 없다. ②처럼 모든 사람의 후생을 더 높일 수 있다면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므로 아직 최적이 아니다. ④는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여 파레토 최적의 의미와 반대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후생 증가에 다른 누군가의 후생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③이 파레토 최적상태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 사회 상태의 변화가 개선된 것인지를 평가하는 보상원칙(compensation principle)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파레토 개선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상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칼도(Kaldor) 기준에 의하면 사회상태의 변화로 인해 혜택을 얻는 사람의 이득으로 손해보는 사람의 손해를 실제 보상해 주는 경우에 개선된 것으로 평가한다.

③ 1원에 대한 가치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한 것으로 가정한다.

④ 스키토브스키(Scitovsky)는 자원재배분으로 효용가능경계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기 위해 칼도기준을 이중으로 적용하는 보상원칙을 제시하였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정답은 ②이다. 칼도 기준은 손실을 **실제로 보상했는지**가 아니라, 수혜자의 이득으로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도 남을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파레토 개선은 누구의 후생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사람의 후생이 높아지는 변화이다. 현실의 정책에는 수혜자와 피해자가 함께 생기는 경우가 많아 이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보상원칙은 **수혜자의 이득으로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지**를 살펴 평가 범위를 넓힌다.

② (X) 칼도 기준의 핵심은 **실제 보상이 아니라 잠재적 보상 가능성**이다. 수혜자가 피해자의 손실을 모두 보상하고도 이득을 남길 수 있으면 개선으로 평가하며, 보상금이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보상하여 아무도 손해 보지 않게 만들면 파레토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이것을 칼도 기준의 필수 요건으로 삼으면 안 된다.

③ (O) 금전으로 표시한 이득과 손실을 합산할 때에는 누구에게 귀속되는 1원인지에 따라 별도의 분배 가중치를 두지 않는다. 이 의미에서 **각 개인의 1원을 동등하게 취급**한다. 모든 사람의 화폐 한계효용이 현실에서도 같다고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분배와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④ (O) 효용가능경계가 교차하면 A에서 B로의 변화뿐 아니라 B에서 A로 되돌아가는 변화도 칼도 기준을 통과하는 역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스키토브스키의 이중 기준은 **정방향 변화는 칼도 기준을 통과하고 역방향 변화는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하여 이러한 모순을 배제한다.

NoteBase

문 3. 시장실패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자연독점이 발생하는 경우

②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소비가 불가능한 경우

③ 정보가 비대칭적인 경우

④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배제성**을 뜻하며, 그 자체가 시장실패의 원인은 아니다. 오히려 비배제성이 있으면 대가를 내지 않고도 편익을 얻으려는 무임승차 때문에 시장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선지별 해설

시장실패는 시장의 자율적인 거래만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장지배력, 정보문제, 외부효과, 공공재의 특성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가격을 지불해야 소비할 수 있다는 통상적인 거래원칙 자체는 원인이 아니다.

① O: 자연독점은 규모의 경제 등으로 하나의 기업이 전체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여러 기업이 나누어 공급하는 것보다 비용상 유리한 경우이다. 경쟁이 제한되고 독점기업이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게 정하여 공급량을 줄이면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② X: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소비할 수 없다는 것은 **비지불자를 배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공급자가 대가를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시장거래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시장실패와 연결되는 것은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 등이며, 지불 여부에 따른 소비 제한 그 자체가 아니다. 구매력의 부족에 관한 분배 문제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문제도 구별해야 한다.

③ O: 거래 당사자들이 가진 정보가 다르면 상대방의 특성이나 행동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워 역선택·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결과 효율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

④ O: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활동이 시장가격을 통한 보상 없이 제3자의 비용이나 편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사적 비용·편익과 사회적 비용·편익이 달라져** 외부불경제는 과다 생산, 외부경제는 과소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NoteBase

문 4. 공공재 최적규모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무엘슨 모형에서는 개인이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자발적으로 표시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② 사무엘슨 모형에서는 개인들의 사용재와 공공재 간의 한계대체율의 합과 한계변환율이 같을 때 공공재 최적조건이 달성된다.

③ 린달은 사무엘슨 모형에서 공공재 선호를 자발적으로 표출한다는 사실을 비판하면서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통한 공공재 최적이론을 제시하였다.

④ 수요표출기구(demand revelation mechanism)는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공공재 비용 부담분과 자신이 표출한 선호 간의 관계가 상호 독립적이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린달의 공공재 이론은 사무엘슨의 최적조건 정식화보다 앞선다. 린달이 사무엘슨의 선호표출 가정을 비판해 이론을 제시했다는 설명은 순서를 거꾸로 서술했으며, 린달 방식에도 진실한 선호표출의 문제가 남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사무엘슨 모형의 최적 공급량을 도출하려면 개인의 진정한 공공재 선호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선지는 이 이론적 분석에서 개인이 선호를 사실대로 표시하여 선호 정보가 주어진다고 보는 전제를 말한다. 현실에서도 자발적으로 진실한 선호를 표출한다는 보장은 아니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호를 숨기는 무임승차 문제가 별도로 존재한다.

② O: 순수공공재는 동일한 공급량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비하므로 한 단위를 추가할 때의 편익을 사람별로 합산한다. 사용재로 평가한 개인별 한계대체율을 합한 값이 생산 측 한계변환율과 같아지는 $\sum_i MRS_i = MRT$가 내부해에서의 사무엘슨 조건이다. 즉 사회 전체의 한계편익과 공공재 추가 공급의 한계비용을 일치시킨다.

③ X: **린달이 사무엘슨을 비판하여 이론을 제시했다는 선후 관계가 잘못**되었다. 린달은 개인별 비용 부담률에 따라 각자가 원하는 공공재 수량을 제시하고, 모두가 같은 수량에 동의하는 균형을 설명했다. 린달의 논의는 사무엘슨의 공공재 최적조건 정식화보다 앞서며, 린달 방식 자체에도 개인이 진정한 선호를 숨길 유인이 남는다. 따라서 선호표출 문제를 해결한 후대의 이론처럼 서술할 수 없다.

④ O: 수요표출기구의 핵심은 자신의 선호를 낮게 신고하여 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의 전략적 유인을 없애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같은 공공재 공급 대안에 대한 개인의 부담 규칙을 그 개인이 신고한 선호값에 직접 연동하지 않고 설계한다는 취지이다. 다만 신고가 공급 대안의 선택을 바꾸면 그 결과에 따른 부담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부담액이 어떤 경로로도 신고와 무관하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NoteBase

문 5. 사회후생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롤즈의 사회후생함수는 최소극대화원칙으로 대변된다.

② 평등주의적 가치판단을 반영하는 사회후생함수에서는 부자의 후생과 빈자의 후생이 똑같은 중요성을 갖는다.

③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에서 평등주의 성향이 강화될수록, 롤즈적 사회후생함수에 가까워진다.

④ 벤담류의 공리주의적 가치판단을 반영하는 사회후생함수에서 부자의 효용과 빈자의 효용을 각각 X, Y 축으로 하는 무차별 곡선으로 표현하면, 어느 점에서든 -1의 기울기를 갖는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가 옳지 않다.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후생 수준이 낮은 사람의 효용 증가를 더 중시한다. 반면 동일 가중치의 벤담식 함수는 두 사람의 **효용 증가분을 같은 비중**으로 합산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롤즈적 사회후생함수는 가장 낮은 효용을 가진 사람의 후생을 기준으로 사회후생을 평가한다. 두 사람의 효용을 X, Y라고 하면 $W = \min\{X, Y\}$로 표현하며, 이 최솟값을 가능한 한 크게 하는 최소극대화 원칙을 따른다.

② (X)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후생 수준이 낮은 사람의 효용 증가에 더 큰 한계 사회후생 가중치를 두어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중시한다. 따라서 부자와 빈자의 효용 한 단위 증가를 언제나 똑같이 평가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과 서로 다른 후생 수준에서의 한계 가중치가 같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한다.

③ (O) 평등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효용이 높은 사람의 추가 효용보다 효용이 낮은 사람의 개선을 더 중시한다. 이러한 불평등 회피가 극단적으로 강해지는 표준적인 경우에는 가장 불리한 사람의 효용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롤즈적 함수에 가까워진다.

④ (O) 동일 가중치의 벤담식 사회후생함수는 $W = X + Y$이다. 사회후생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Y = W - X$이므로 사회무차별곡선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다. 이는 효용 공간에서 한 사람의 효용 한 단위 감소를 다른 사람의 효용 한 단위 증가로 상쇄할 수 있다는 뜻이며, 소득 한 단위의 사회적 가치를 항상 같게 본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6. 투표의 역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위투표자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다봉형 선호를 가진 유권자가 있을 때 발생한다.

③ 안건이 세 개 이상인 경우에 발생한다.

④ 투표시행의 순서가 투표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투표의 역설에서는 다수결의 선호가 순환하므로 **표결 순서에 따라 최종 승자가 달라질 수 있다**. 순서가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반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투표의 역설은 개인의 선호가 일관적이어도 다수결의 집단 선호가 순환하여 안정적인 승자를 정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한 차원의 공통 정책축에서 모든 유권자의 선호가 단봉형이라는 조건 아래에서는 중위투표자의 선호가 다수결의 안정적 결과가 된다. 따라서 역설이 나타난 상황에서는 **이 정리의 조건에 따른 안정적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② O: 같은 정책축에서 어느 유권자의 선호가 다봉형이면 중위투표자 정리의 단봉형 조건이 깨져 다수결의 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다봉형 선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역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유권자들의 선호 조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③ O: 엄격한 쌍대 다수결에서 A가 B보다, B가 C보다, 다시 C가 A보다 선호되는 순환을 만들려면 **최소 세 개의 안건**이 필요하다. 두 안건만으로는 이런 세 방향 순환을 만들 수 없다. 안건이 세 개 이상이라는 것만으로 순환이 반드시 생긴다는 뜻은 아니다.

④ X: 투표의 역설이 있으면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순서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수결에서 A가 B를 이기고, B가 C를 이기며, C가 A를 이긴다고 하자. A와 B를 먼저 대결시키고 승자 A를 C와 대결시키면 C가 최종 승자이지만, B와 C를 먼저 대결시키고 승자 B를 A와 대결시키면 A가 최종 승자이다. 따라서 투표 순서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④가 옳지 않다.

NoteBase

문 7. 공공선택에서 최적 다수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치적 균형은 의사결정비용과 의안 반대자들의 외부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달성되어야 한다.

② 모든 의안에 대해 정치적 합의를 달성하는 찬성비율이 동일해야 한다.

③ 정치적 균형을 달성하는 데 발생하는 총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④ 상기 내용은 모두 옳지 않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정답은 ③이다. 최적 다수결제는 **의사결정비용과 외부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찬성 요건을 선택한다. 두 비용의 수준이 서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최적 의결정족수는 의사결정비용과 외부비용의 **크기가 같아지는 지점**이 아니라 두 비용의 합이 가장 작은 지점에서 정한다. 찬성 요건을 높이면 합의를 얻는 데 드는 의사결정비용은 커지고, 반대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강요될 가능성과 기대 외부비용은 줄어드는 것이 기본 관계이다. 내부 최적점에서는 찬성 요건을 높일 때의 한계적 비용 증가와 한계적 외부비용 감소를 비교한다.

② (X) 의안별로 이해관계의 대립 정도, 불리한 결정이 초래할 피해, 합의를 얻기 위한 협상 부담이 다르다. 따라서 비용 구조에 따라 **최적 찬성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의안에 동일한 찬성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③ (O) 최적 다수결제는 **의사결정비용과 기대 외부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의결 기준을 선택한다. 지나치게 낮은 찬성 요건은 반대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키울 수 있고, 만장일치에 가까운 높은 요건은 합의에 필요한 시간과 협상 비용을 키울 수 있으므로 두 비용을 함께 고려한다.

④ (X) ③의 총비용 최소화가 최적 다수결제의 판단 기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의 설명이 모두 옳지 않다는 진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8. 우하향의 수요곡선과 우상향의 공급곡선을 가진 시장에서 피구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구세 부과는 외부불경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② 기업의 사적 이윤극대화 생산량에서 발생하는 한계손실(marginal damage)만큼을 피구세로 부과하면 외부성은 해소된다.

③ 기업이 감축하는 생산량 1단위당 피구세만큼의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해도 사회적 적정 생산량에 도달할 수 있다.

④ 경쟁시장 기업에 대한 피구세 부과는 상품의 가격 인상을 초래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적정 피구세율은 사적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적정한 생산량에서의 한계외부손실**을 기준으로 정한다. 기업이 부담하지 않던 외부비용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과다 생산을 줄이는 것이다.

선지별 해설

생산의 외부불경제가 있으면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 한계비용에 한계외부손실을 더한 값이다. 경쟁시장은 사적 비용만 고려하여 과다 생산할 수 있으므로, 피구세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외부손실을 단위당 세금에 반영한다.

① O: 피구세는 생산자가 외부에 전가하던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생산 유인을 조정한다. 그 결과 시장 생산량을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는 외부불경제 교정 수단이 된다. 외부불경제의 해결은 모든 오염을 반드시 0으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외부비용을 내부화한다는 뜻이다.

② X: 피구세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외부손실**만큼 부과해야 한다. 사적 이윤극대화 생산량에서 측정한 한계손실을 그대로 쓰면 일반적으로 적정 세율과 다를 수 있다. 한계손실이 일정한 특수한 경우 두 값이 같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세율 결정 원칙은 아니다.

③ O: 기존 생산량을 기준으로 감축한 생산 1단위마다 적정 피구세와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주면, 한 단위를 더 생산할 때 그 보조금을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생산 증가의 한계 기회비용**이 단위당 세금과 같아져 동일한 감축 유인을 줄 수 있다. 이는 기업 수와 감축 기준 등을 고정한 비교이며, 장기 진입 유인이나 정부 재정부담까지 두 정책이 같다는 뜻은 아니다.

④ O: 우하향 수요와 우상향 공급 아래에서 생산자에게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한 공급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한다. 거래량이 감소하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상품 가격은 상승한다. 다만 세금 전액이 항상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며, 생산자의 세후 수취가격과 소비자 지불가격은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문 9.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코즈(R.Coase) 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의 설정이 명확해야 한다.

②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면 사회적 최적보다 과소생산된다.

③ 소비 측면에서 외부경제가 존재하면 사회적 편익이 사적편익보다 크다.

④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해 조세 또는 보조금을 사용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가 가장 옳지 않다. 외부불경제가 교정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끼치는 비용이 시장의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아 **사회적 최적보다 과다생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소생산은 외부경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코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고 거래비용이 없으며 당사자 간 협상이 가능하다는 등의 조건에서 자발적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분명해야 협상 대상과 보상 관계를 정할 수 있다. 재산권의 명확성만으로 현실의 모든 외부성이 해결된다는 뜻은 아니다.

② (X) 외부불경제가 있으면 의사결정자가 제3자에게 발생시키는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므로, 교정되지 않은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최적보다 과다생산·과다소비**된다. 예를 들어 생산의 외부불경제에서는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큰데, 기업은 사적 비용을 기준으로 생산하여 생산량이 지나치게 많아진다.

③ (O) 소비의 외부경제는 소비자의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보상받지 않는 편익을 주는 경우이다. 사회적 한계편익은 사적 한계편익에 외부 한계편익을 더한 값이므로 사적 한계편익보다 크다. 소비자가 자신의 편익만 고려하면 사회적 최적보다 소비가 적어질 수 있다.

④ (O) 외부불경제에는 교정세를 부과하여 외부 비용을 의사결정자가 부담하게 하고, 외부경제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외부 편익을 선택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적절하게 설계된 조세와 보조금은 사적 유인과 사회적 유인의 차이를 줄여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수단이다.

NoteBase

문 10.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와 함께 환경세 부과시 초래되는 초과부담을 감축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이중배당금의 효과가 있다.

② 배출권거래제도는 배출권이 거래되는 경쟁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세에 비해 불리하다.

③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물질 배출량 통제의 측면에서는 환경세보다 유리하다.

④ 환경세는 인플레이션기 적정 세율 유지를 위한 세율 조정이 필요하나, 배출권거래제도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이중배당은 오염 감소와 함께 환경정책 수입으로 **기존의 왜곡적인 조세를 줄이는 효과**를 말한다. 배출권거래 자체가 환경세의 초과부담을 자동으로 줄이는 것은 아니며, 수입의 발생과 사용 방식이 중요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이중배당은 환경오염 감소라는 첫 번째 편익과, 환경세 수입 등을 활용해 **기존의 왜곡적인 조세를 줄여 초과부담을 낮추는 편익**을 함께 기대하는 것이다. 환경세 자체가 초래한 초과부담을 배출권거래제가 자동으로 줄인다는 뜻이 아니다. 특히 배출권을 무상으로 배분하면 정부 수입이 자동 발생하지 않으므로 거래제도라는 이유만으로 이중배당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배출권을 경매하고 그 수입으로 다른 조세를 낮추는 설계에서는 수입 환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② O: 배출권거래제가 최소 비용으로 주어진 감축량을 달성하려면 거래를 통해 기업 간 한계감축비용이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경쟁적인 시장과 원활한 거래가 중요하며, 시장지배력·거래비용·유동성 부족은 그 기능을 저해한다. 환경세에 비해 배출권 거래시장의 형성과 운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이 불리한 측면이다.

③ O: 배출권거래제는 허용되는 총배출량을 먼저 정하고 배출권을 그 범위에서 발행하므로, 제도가 준수된다는 전제에서 배출량의 상한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환경세는 단위당 배출 비용을 정하지만 실제 배출량은 기업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므로, 배출량을 확실하게 통제하는 측면에서는 거래제가 유리하다.

④ O: 단위당 명목 금액으로 정한 환경세는 물가가 오르면 실질 부담이 줄어들어 의도한 유인을 유지하려면 세율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반면 총량을 고정한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배출권 가격이 시장에서 조정되므로 같은 이유의 명목 세율 조정은 필요하지 않다. 이는 제도의 감시·집행이나 배출총량 검토까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11. 환경 보존 및 개선에 따른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출함수 추정을 통해 환경을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지불용의 금액을 추정한다.

② 환경보존 및 개선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분을 헤도닉가격 접근법을 통해 추정한다.

③ 설문조사를 통해 가상적인 환경개선에 대한 지불용의 금액을 조사한다.

④ 환경보존 및 개선을 위한 규제로 발생되는 민간부문의 준수비용을 산출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환경규제를 지키기 위해 기업 등이 부담하는 준수비용은 **환경정책의 비용**이지, 환경개선으로 사람들이 얻는 편익이 아니다. 편익은 환경의 질 향상에 대한 지불용의액 등을 통해 평가한다.

선지별 해설

환경개선은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의 지불용의액이나 관련 시장에서 드러나는 가치 변화를 이용해 편익을 추정한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과 그 결과 얻는 편익은 별도로 측정해야 한다.

① O: 지출함수는 주어진 가격과 환경 수준 아래에서 일정한 효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지출을 나타낸다. 환경개선 전후에 같은 효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 차이를 이용하면, 소비자가 그 개선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금액인 지불용의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단순히 실제 환경 관련 지출액을 합한다는 뜻은 아니다.

② O: 헤도닉가격 접근법은 주택가격을 구성하는 여러 특성 가운데 환경의 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한다. 주택 규모·입지 등 다른 조건을 통제한 뒤 환경보존·개선에 따른 가격 차이를 추정하여 환경 편익의 화폐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모든 주택가격 상승을 환경 편익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③ O: 가상적인 환경개선 상황과 지불 조건을 제시하고 지불용의액을 묻는 것은 조건부가치측정법에 해당한다. 시장가격이 없는 환경재의 편익을 조사할 수 있으며, 설문 설계와 가상 상황에 따른 응답 편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X: 규제 준수를 위한 방지시설 설치·운영 등의 지출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측면**의 항목이다. 그것만으로 환경개선의 편익을 추정할 수는 없다.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환경개선으로 얻는 편익과 이를 달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구분하여 비교한다.

NoteBase

문 12. 불평등도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니(Gini) 계수는 로렌츠(Lorenz) 곡선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② 5분위배율은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을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로 나눔으로써 구할 수 있다.

③ 로렌츠(Lorenz) 곡선은 소득분배의 평등도에 대한 서수적인 평가를 나타내며, 대각선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보다 평등한 분배를 나타낸다.

④ 달튼(Dalton)의 평등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정답은 ②이다. 5분위배율은 **상위 20% 소득 ÷ 하위 20% 소득**으로 계산한다. 선지는 이 비율의 분자와 분모를 반대로 설명했다.

선지별 해설

① (O) 지니계수는 **완전평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을 완전평등선 아래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누어 구한다. 소득과 인구의 누적 비율을 0부터 1까지 표시하면 그 삼각형의 면적은 1/2이므로, 두 곡선 사이 면적의 두 배가 지니계수이다. 통상적인 비음수 소득분포에서는 값이 작을수록 평등하다.

② (X) 5분위배율은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두 집단의 인구 비중이 같으므로 상위 20%의 소득점유비율을 하위 20%의 소득점유비율로 나누어도 같다. 선지는 분자와 분모를 거꾸로 제시했다. 하위 집단 소득이 양수인 통상적 경우, 배율이 클수록 두 집단의 소득 격차가 크다.

③ (O) 로렌츠곡선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배열한 누적 인구비율에 대응하는 누적 소득비율을 나타낸다. 한 곡선이 다른 곡선보다 전 구간에서 완전평등선에 가까우면 더 평등한 분배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분배의 순서를 비교하는 서수적 판단**이며, 곡선끼리 교차하면 로렌츠 기준만으로 어느 분배가 더 평등한지 일의적으로 순위를 정할 수 없다.

④ (O) 달튼의 평등지수는 동일하고 오목한 효용함수 등 일정한 가정 아래 **현재 분배에서의 사회후생을 완전균등분배에서의 최대 사회후생과 비교한 비율**이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으로 인한 후생 손실이 작고, 완전평등에서는 1이 된다. 이 평등지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불평등·후생손실 지수를 혼동하면 안 된다.

NoteBase

문 13.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가 $S = c - tE$로 설정되어 있다고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S=보조금, c=기초수당, t=한계세율, E=스스로 벌어들인 소득)

① c = 50만원, t = 0.5일 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E는 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②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변수는 c와 t이다.

③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t가 인하되면 보조금이 감소한다.

④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c가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증가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S = c - tE$에서 다른 조건이 같으면 t 인하는 차감액 tE를 줄인다. 따라서 **소득 E가 양수일 때 보조금은 증가**하고, E가 0이면 변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S가 0보다 커야** 한다. 금액을 만원 단위로 두면 50-0.5E0이므로 E(50)/(0.5)=100이다. 따라서 스스로 번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정확히 100만원이면 보조금은 0이다.

② O: c는 소득이 없을 때 지급하는 기초수당이고, t는 소득이 1단위 늘어날 때 보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정하는 한계세율이다. 정부는 **보장 수준인 c와 보조금 감소율인 t**를 정책변수로 선택한다. E는 개인이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이 식에서 정부가 직접 정하는 급여 기준값과 구별된다.

③ X: $S = c - tE$에서 c와 E를 고정하면 t가 낮아질수록 차감액 tE가 줄어든다. 따라서 **E가 양수이면 보조금은 증가**하며, E가 0이면 보조금은 c로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c = 50만원, E = 60만원일 때 t가 0.5에서 0.4로 내려가면 S는 20만원에서 26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조금이 감소한다는 ③이 옳지 않다.

④ O: t와 E가 같다면 c가 커진 만큼 S가 증가하여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이전 규모가 커진다. 또한 t가 양수일 때 보조금이 0이 되는 소득 기준은 $E^* = \frac{c}{t}$이므로 c가 커지면 수급 범위도 넓어진다. 다른 조건을 고정한 이 모형에서는 **기초수당의 인상이 소득보장과 재분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NoteBase

문 14. 갑과 을, 두 사람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갑의 소득을 1,600, 을의 소득을 400이라고 하자. 각각의 소득이 각자의 후생수준이라고 할 때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롤즈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진다면, 이 사회의 앳킨슨 지수는 1이다.

②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하고 앳킨슨 지수로 평가하면, 이 사회는 소득이 가장 공평하게 분배된 사회 중 하나이다.

③ 롤즈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하고 앳킨슨 지수로 평가하면, 이 사회의 소득분배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수준이다.

④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진다면, 이 사회의 앳킨슨 지수는 0.6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정답은 ②이다. 평균소득은 1,000이며, 소득의 합을 후생으로 보는 공리주의에서는 균등분배대등소득도 1,000이므로 **앳킨슨 지수는 0**이다. 롤즈식 함수에서는 균등분배대등소득이 400이므로 지수는 0.6이다.

선지별 해설

앳킨슨 지수는 A=1-y_e/ y로 구한다. 여기서 y는 평균소득이고, y_e는 현재와 같은 사회후생을 얻도록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균등분배대등소득이다. 평균소득은 y=(1600+400)/2=1000이다.

① (X) 롤즈식 사회후생은 최소소득인 400으로 결정된다. 두 사람이 각각 400을 받아도 같은 사회후생이므로 $y_e = 400$이다. 따라서 $A = 1 - 400/1000 = 0.6$이며 1이 아니다.

② (O) 소득이 그대로 효용이 되는 공리주의 함수에서는 현재 사회후생이 $W = 1600 + 400 = 2000$이다. 두 사람에게 각각 1,000을 주어도 합이 2,000이므로 $y_e = 1000$, $A = 1 - 1000/1000 = 0$이다. 따라서 이 가치판단과 지수로는 불평등에 따른 후생 손실이 없는 최저 지수로 평가된다. 실제 두 사람의 소득이 같다는 뜻은 아니다.

③ (X) 롤즈식 앳킨슨 지수는 0.6으로, 최대치인 1이 아니다. 총소득 2,000이 같더라도 한 사람의 소득이 0이고 다른 사람이 전부 가진 경우보다 최소소득 400인 현재 분배가 낫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④ (X) 공리주의 함수에서는 소득 총합이 같으면 사회후생이 같으므로 앳킨슨 지수는 0이다. 0.6은 이 문항에서 롤즈식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했을 때의 값이다.

NoteBase

문 15. 빈곤 및 빈곤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의 기본적인 최저생계비를 객관적으로 추정하여 빈곤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라이덴 방식은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여 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③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빈곤선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④ 빈곤층 내부의 소득재분배가 잘 이루어지면 빈곤갭은 감소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빈곤갭은 빈곤선까지 부족한 소득을 합한 것이므로, **빈곤층 전체 소득이 그대로인 내부 재분배**만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재분배 후에도 모두 빈곤선 아래에 있으면 부족액의 분포만 달라지고 합계는 같다.

선지별 해설

빈곤선은 빈곤 여부를 판정하는 소득 기준이며 절대적·상대적·주관적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빈곤갭은 빈곤층의 소득이 빈곤선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빈곤층 내부의 소득불평등 자체와는 구별된다.

① O: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화·서비스의 비용을 추정하여 빈곤선을 설정할 수 있다. 사회의 전반적인 소득분포보다 필수생활비를 중심으로 하는 절대적 빈곤선의 접근이다.

② O: 라이덴 방식은 설문으로 소득 수준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조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빈곤선을 설정하는 접근이다. 어떤 소득 수준을 생활에 부족하거나 적정하다고 여기는지를 반영하므로, 필수 재화의 비용만으로 빈곤선을 계산하는 객관적 방식과 구별된다.

③ O: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대적 빈곤선의 대표적인 설정 방식이다. 사회의 소득 수준과 분포에 비추어 낮은 소득 상태를 판정하므로, 중위소득이 변하면 기준선도 달라질 수 있다.

④ X: 빈곤선이 고정되어 있고 재분배 후에도 두 사람 모두 빈곤층에 남는다면, 한 사람의 부족액이 줄어든 만큼 다른 사람의 부족액이 늘어 **빈곤갭의 합계는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빈곤선이 100, 두 소득이 40과 80이면 총부족액은 60 + 20 = 80이다. 내부 이전으로 소득이 50과 70이 되어도 총부족액은 50 + 30 = 80이다. 빈곤층 내부의 불평등은 완화될 수 있지만, 빈곤갭이 그 개선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16. 국민연금이 저축행위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이 개인재산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인식되어 자발적인 저축을 줄이게 된다.

② 국민연금제도 시행으로 인해 은퇴를 앞당기며, 조기은퇴에 대비하여 저축을 늘린다.

③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 상속재산을 늘리기 위해 저축을 증가시킨다.

④ 국민연금의 재산대체효과, 은퇴효과, 상속효과는 모두 저축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정답은 ④이다. **재산대체효과는 자발적 저축을 줄이고**, 은퇴효과와 상속효과는 저축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세 효과가 모두 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재산대체효과는 자발적 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장래 연금급여를 노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식하면, 같은 노후 소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별도로 축적해야 할 개인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금자산이 사적 저축을 일부 대신하는 것이다.

② (O) **은퇴효과는 조기은퇴에 대비한 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연금제도가 은퇴를 앞당기면 근로소득 없이 생활해야 할 기간이 길어지므로, 그 기간의 소비를 충당하기 위해 근로기간 중 저축을 더 하려는 유인이 생긴다. 이는 선지가 설명하는 은퇴 경로의 효과이며, 모든 개인이 반드시 조기은퇴한다는 뜻은 아니다.

③ (O) **상속효과는 자녀의 부담을 보전하려는 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부모가 연금제도로 자녀세대의 보험료·재정 부담이 커질 것을 예상하고 자녀의 후생을 고려한다면,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저축을 늘릴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 간 이타심과 상속 동기 등을 전제로 한다.

④ (X) 세 효과의 방향은 같지 않다. **재산대체효과는 저축 감소, 은퇴효과와 상속효과는 저축 증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모두 저축을 늘린다는 설명은 틀리다. 자발적 저축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는 각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연금기금 적립까지 포함한 국민저축의 변화와도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문 17. 공공경비 팽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대하는 현상을 바그너 법칙이라고 한다.
ㄴ. 갑작스러운 사회적 혼란기에 정부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가 혼란기를 벗어나더라도, 정부지출이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상을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라고 한다.
ㄷ. 브라운-잭슨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충분히 크다면, 소득 증가에 따라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중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ㄹ. 정부부문의 생산성이 정체상태에 있어서 비용절감이 어렵고, 정부지출의 규모가 점차 커지는 것을 보몰효과라 한다.

① ㄱ, ㄹ

②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ㄹ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공공경비는 **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뿐 아니라 위기 이후 높아진 지출 수준의 유지, 생산성 정체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도 팽창할 수 있다. 각 보기는 서로 다른 팽창 원인과 해당 이론을 연결하고 있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바그너 법칙은 경제가 발전하고 1인당 소득이 높아지면서 행정·복지·교육 등 공공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 **국민경제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장기적 경향을 설명한다. 정부지출의 절대액 증가만이 아니라 상대적 규모 확대에 주목한다.

ㄴ. O: 전위효과는 전쟁이나 대규모 사회적 혼란으로 조세 부담과 정부지출이 급증한 뒤, 혼란이 끝나도 **이전보다 높은 지출 수준이 유지**되는 현상이다. 위기 중 높아진 조세 부담의 수용 수준과 확대된 정부 역할 등이 지출을 종전 수준으로 완전히 되돌아가지 않게 하므로 계단식 팽창을 설명한다.

ㄷ. O: 브라운-잭슨의 미시적 접근은 공공서비스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소득·선호·조세 부담·비용 등의 요인으로 정부지출을 설명한다. 공공서비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충분히 크면** 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와 지출의 증가가 커져 정부지출 비중이 상승할 수 있다. 예컨대 가격 등 다른 조건이 같고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면 수요량은 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다.

ㄹ. O: 보몰효과는 공공서비스처럼 노동집약적이어서 생산성 향상이 더딘 부문에서도,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되는 다른 부문의 임금 상승을 따라 임금이 오르면 **서비스 단위당 비용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생산성을 높여 비용을 절감하기 어려워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에도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해진다.

따라서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으므로 이들을 함께 포함한 ④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8.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높지 않도록 유도한다.

② 조세제도 전반의 누진율을 강화한다.

③ 고용보험제도를 강화한다.

④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정답은 ①이다. 자동안정화장치가 강하려면 경기 변동에 따라 세수와 이전지출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세수의 소득탄력성을 낮추는 방향**은 세부담의 자동 조정 효과를 약화시킨다.

선지별 해설

① (X)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높으면 경기 상승으로 소득이 늘 때 세수가 더 민감하게 증가하고, 경기 하강 때에는 세수가 더 크게 줄어든다. 이는 가처분소득과 총수요의 변동을 완화한다. 세수의 소득탄력성을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은 이러한 자동 반응을 약화시키므로 자동안정화장치 강화와 가장 거리가 멀다.

② (O) 누진적인 조세제도는 소득이 증가할 때 세부담이 더 크게 늘어나도록 하여 경기 과열을 억제하고, 소득이 감소할 때에는 세부담을 줄여 가처분소득의 하락을 완화한다. 따라서 누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설계는 자동안정화 기능을 높이는 방향이다.

③ (O)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등은 경기 침체로 실업이 늘어날 때 기존의 자격·지급 규정에 따라 지출이 증가하여 실직자의 소득과 소비를 지지한다. 경기가 회복되어 실업이 줄면 지급도 감소하므로 경기 변동을 완충한다.

④ (O) 소득 감소나 생활 곤란에 따라 급여 수급자가 늘어나는 사회보장제도는 경기 침체기에 이전지출을 자동으로 확대하여 가처분소득을 보완한다. 이러한 소득·고용 연계 장치를 강화하면 자동안정화 기능이 커진다. 모든 사회보장 지출이 똑같이 경기 대응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19. 정부의 재분배 정책을 찬성하는 논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공평분배는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평분배가 실현되도록 재분배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② 누구나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일종의 사회보험으로서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③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만을 소유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④ 미지의 원시적 상황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이 극대화되도록 사회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재분배 정책은 바람직하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노직의 소유권리론은 **정당한 취득과 자발적 이전으로 얻은 재산의 권리**를 중시하므로 일반적인 강제 재분배를 지지하는 논리와 거리가 멀다. 부당한 소유의 교정과 분배 결과를 평등하게 만드는 정책은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사람들이 빈곤 완화와 더 공평한 분배 자체에서 만족을 얻는다면 그 편익은 기부자 한 사람에게만 귀속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 이루어진 재분배의 편익을 함께 누릴 수 있어 자발적 기부에는 무임승차가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재적 성격은 정부 개입을 지지하는 논리가 된다.

② O: 현재의 소득이나 지위가 계속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들은 실업·질병 등으로 저소득 상태에 놓일 위험을 분담하려 할 수 있다. 재분배를 불리한 상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또는 보험으로 보면, 현재 수혜자가 아닌 사람도 위험 보호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 논거가 된다.

③ X: 이 설명은 **정당한 소유 권원의 존중**과 일반적인 소득 재분배를 혼동한다. 노직의 소유권리론에서는 정당하게 취득하고 자발적으로 이전받은 재산의 보유를 존중하므로, 결과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그 재산을 강제로 재분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부당한 취득·이전의 교정은 별도의 문제이며, 이를 모든 재분배 정책의 찬성 논리로 확대할 수 없다.

④ O: 롤스의 원초적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계층·재산 등을 모르는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사회 원칙을 선택한다고 본다. 자신이 불리한 지위에 놓일 가능성을 고려해 최소수혜자의 전망을 개선하는 차등의 원칙을 지지한다는 논리가 재분배의 근거가 된다. 이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 등의 원칙을 전제로 한 논의이지, 어떤 수단으로든 최빈층의 소득만 높이면 된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20. 어떤 공공투자사업의 초기투자비용이 400억원이고, 투자 다음 해부터 25년간 매년 편익 20억원, 유지비용 0원이 발생한다. 사회적 할인율이 0%라고 가정할 때, 이 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와 B/C값은 각각 얼마인가?(사업의 잔존가치는 0이라고 가정한다.)

① 100억원, 1.25

② 100억원, 0.8

③ 500억원, 1.25

④ 500억원, 0.05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할인율이 **0%**이므로 25년간 편익의 현재가치는 500억원이다. 초기투자비용 400억원을 빼면 순편익은 100억원이고, $B/C = \frac{500}{400} = 1.25$이다.

계산 과정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편익 현재가치에서 비용 현재가치를 뺀 값이고, B/C는 편익 현재가치를 비용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이다. 두 지표는 차액과 비율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편익의 현재가치: 사회적 할인율이 0%이므로 **미래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투자 다음 해부터 25년간 발생하는 편익의 합은 20억원 × 25 = 500억원이다. 투자한 해에 별도의 편익 20억원을 더하지 않는다.

비용의 현재가치: 초기투자비용 400억원은 현재 지출이고, 이후 유지비용은 0원이다. 잔존가치도 0이므로 추가할 회수액이 없으며 비용 현재가치는 400억원이다.

순편익의 현재가치: 500억원 − 400억원 = 100억원이다. 500억원은 비용을 빼기 전의 총편익 현재가치이지 순편익이 아니다.

편익·비용 비율: $B/C = \frac{500}{400} = 1.25$이다. **편익을 분자, 비용을 분모**에 놓으며, 두 금액의 단위가 같으므로 비율 자체에는 화폐 단위가 없다.

따라서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100억원이고 B/C는 1.25이며, 두 값을 함께 제시한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1.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조세 부담이 누진적이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우리나라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거래 시 부과된다.

③ 역진세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세율이 상승하는 것이다.

④ 래퍼곡선(Laffer curve)에서는 세율이 증가하더라도 조세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

정답 4번

①

누진성은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높은 평균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분배의 형평성**과 관련된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조세가 경제주체의 선택을 얼마나 왜곡하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누진적이라는 사실만으로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

NoteBase

②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거래 자체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의 부동산 보유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유세**이다.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1.1>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삭제<2020.12.29>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8.18>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③

역진세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세율이 하락**하는 조세이다. 평균세율이 상승하는 것은 누진세이다.

④

래퍼곡선에서 **세수가 최대가 되는 세율을 넘어서면 세율이 높아질수록 조세수입이 감소**한다. 근로·투자 등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과세기반이 줄어드는 효과가 세율 인상 효과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NoteBase

문 22. 중립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부문의 경제행위에 전혀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② 소득세를 부과한 결과, 납세자의 노동공급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중립세라고 볼 수 없다.

③ 물품세를 부과한 결과, 가격이 오르고 해당 상품 소비가 줄었다면 중립세라고 할 수 없다.

④ 조세부과의 결과, 대체효과만 있고 소득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정답은 ④이다. 중립세는 상대가격을 왜곡하지 않아 **대체효과는 없고 소득효과는 있는 조세**이다. 선지는 두 효과를 반대로 설명했다.

선지별 해설

① (O) 중립세는 상대가격이나 한계적 선택 유인을 왜곡하지 않아 **대체효과에 따른 자원배분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 조세**이다. 여기서 '전혀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은 소득 감소에 따른 행동 변화까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대표적인 정액세는 구매력을 줄이는 소득효과가 있더라도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다.

② (O) 통상적인 근로소득세는 세후 임금을 낮추어 여가의 기회비용을 바꾸므로 노동과 여가 사이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 선지는 이러한 **과세로 인한 노동공급 유인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다만 노동공급량이 변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비중립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엄밀하지 않다. 중립적인 정액세에도 소득효과로 노동공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③ (O) 특정 상품에 물품세를 부과하여 그 상품의 상대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다른 상품으로 수요를 대체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선지는 이러한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가 발생한 경우를 설명하므로 중립세가 아니다. 단순히 소비량이 줄었다는 결과 자체보다 조세가 상대가격을 왜곡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④ (X) 중립세의 효과를 반대로 설명했다. 중립세는 원칙적으로 **소득효과는 있지만 대체효과는 없는 조세**이다. 세금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은 감소하지만, 재화 간 상대가격이나 한계적 선택 조건을 바꾸지 않으므로 대체효과에 기인한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23. 우리나라의 목적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 경비조달 목적으로 부과되는 조세이다.

② 지출사용처를 사전에 정해놓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상의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의 목적세로는 증여세가 있다.

④ 목적세로 시행되는 사업은 다른 분야 예산사업의 충격이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이 옳지 않다. 증여세는 세수의 사용처를 특정 사업으로 한정한 목적세가 아니라 **보통세**이다. 목적세는 특정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장점과 재정운용이 경직되는 단점을 함께 가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목적세는 특정 사업이나 경비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용도를 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일반적인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용도를 특정하지 않는 보통세와 구별된다.

② (O) 목적세는 세수의 사용처가 미리 정해져 있어 다른 분야의 지출 필요성이 커지더라도 재원을 자유롭게 재배분하기 어렵다. 이처럼 사업 간 재원 조정의 유연성이 낮아지는 것을 재정운용의 경직성이라고 한다.

③ (X) **증여세는 목적세가 아니라 보통세**에 속한다. 증여라는 과세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세수의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다는 것은 다르다. 국세의 대표적인 목적세로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있다.

④ (O) 목적세가 특정 사업에 별도 재원을 연결하면 다른 분야의 예산 수요가 갑자기 늘어도 해당 사업의 재원이 상대적으로 보호되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쉽다. 이 의미에서 다른 예산사업의 충격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 다만 목적세 세수 자체의 감소나 제도 변경 등 모든 재정 충격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24. 능력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경제적 능력의 대리변수로 소득수준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미실현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기가 쉽지 않다.

② 시장을 통하지 않고 발생된 귀속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

③ 여가에 대한 개인적 선호가 반영되지 못한다.

④ 누진적 소득세제하에서는 총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매년 소득변동이 안정적인 사람의 조세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연도별 누진과세에서는 여러 해의 총소득이 같아도 **소득변동이 큰 사람**의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설명은 방향을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선지별 해설

능력원칙은 조세부담을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배분한다는 원칙이다. 소득은 그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지만, 소득의 측정 범위와 개인의 여가 선택, 과세기간 등에 따라 실제 경제적 능력을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① O: 자산가격이 올라 생긴 이득이 아직 처분 등으로 실현되지 않았다면 가치 평가와 납세자금 마련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미실현 소득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② O: 자가주택에서 얻는 주거 서비스처럼 시장에서 현금으로 거래되지 않더라도 경제적 편익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귀속소득은 관측·평가하기 어려워 과세소득에 포함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시장에서 관측된 소득만으로 능력을 측정하면 차이가 발생한다.

③ O: 같은 임금 획득 능력이 있어도 여가를 더 선호하여 적게 일하는 사람은 관측 소득이 낮을 수 있다. **실제 소득만으로는 소득 획득 능력과 여가 선택을 완전히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④ X: 총소득이 같은 기간을 비교할 때, 연도별 누진과세에서는 **소득이 특정 연도에 집중된 사람**이 높은 한계세율 구간을 더 많이 적용받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불리해지는 쪽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변동이 큰 사람이다. 이는 동일한 세율표를 적용하고 소득평균화 등의 조정이 없는 경우의 문제이며, 모든 소득이 동일한 한계세율 구간에 있으면 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NoteBase

문 25.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세 귀착은 무엇인가?

이 귀착은 세입단계와 세출단계를 모두 고려하여 귀착을 파악한다. 일정한 액수의 조세가 징수되는 경우, 그에 의해 야기되는 세입단계의 소득분배 변화와 징수한 조세를 모두 공공지출로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세출단계의 소득분배 변화를 동시에 반영하여 조세의 귀착을 측정한다.

① 차별적 귀착

② 법적 귀착

③ 절대 귀착

④ 균형예산귀착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징수한 조세를 모두 공공지출로 사용하므로, **세입과 세출의 소득분배 효과를 함께** 반영한다. 조세 징수에 따른 부담뿐 아니라 그 재원으로 이루어진 지출의 혜택까지 고려하는 것이 균형예산귀착이다.

공통 해설

균형예산귀착은 조세를 징수하면서 그 세수를 모두 공공지출로 사용할 때 나타나는 소득분배 변화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세입단계에서는 누가 조세를 부담하여 소득이 줄어드는지, 세출단계에서는 누가 공공지출의 혜택을 받는지를 살펴 두 효과를 함께 반영한다. 따라서 지문의 '세입단계와 세출단계를 모두 고려'하고 '징수한 조세를 모두 공공지출로 사용'한다는 설명은 균형예산귀착에 해당한다.

여기서 균형은 **조세수입과 그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지출의 액수가 같다**는 뜻이다. 전체 세입과 세출이 같아도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과 지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사람의 부담과 혜택이 서로 상쇄되거나 소득분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26.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할 때, 균형가격이 1,000원인 어떤 상품의 생산자에게 100원의 물품세를 과세하는 경우, 조세귀착 분석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세 부과는 공급곡선을 단위당 100원만큼 위쪽으로 이동시킨다.

② 100원의 물품세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③ 수요가 가격탄력적일수록 소비자의 물품세 부담은 작아진다.

④ 물품세의 납부 의무를 소비자에게 지우면, 소비자의 조세 부담은 커진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정답은 ④이다. **조세의 실질 부담은 법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수요·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동일한 세금의 납부 의무를 소비자로 바꾸어도 경제적 귀착은 달라지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생산자가 상품 한 단위를 팔 때마다 100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같은 수량을 공급하려면 소비자로부터 받는 가격이 종전보다 100원 높아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 지불가격을 세로축에 표시한 공급곡선은 **수직으로 100원만큼 위로 이동**한다. 이는 곡선의 이동 폭이며, 균형가격이 반드시 100원 오르는 것은 아니다.

② (O) 우상향 공급곡선과 우하향 수요곡선 아래에서 과세 후 소비자 지불가격은 1,000원보다 오르고 생산자 순수취가격은 1,000원보다 낮아진다. 소비자 가격을 P_c, 생산자 순수취가격을 P_p라 하면 $P_c - P_p = 100$이다. 소비자의 단위당 부담 $P_c - 1000$과 생산자의 부담 $1000 - P_p$를 합하면 100원이 된다. **부담을 나누지만 반드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니다.**

③ (O) 공급 조건이 같다면 수요가 가격에 더 탄력적으로 반응할수록 소비자는 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구매를 더 쉽게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전가하기 어려워져 **소비자의 조세 부담 비중은 작아진다.**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이 더 큰 부담을 지는 것이 조세귀착의 기본 원리이다.

④ (X) **법적 납세의무자와 경제적 조세 부담자는 구분**해야 한다. 동일한 단위당 세금을 소비자에게 납부하도록 바꾸어도, 다른 시장 조건이 같으면 소비자 지불가격과 생산자 순수취가격 사이의 100원 차이는 그대로 유지된다. 균형 거래량과 양측의 실질 부담은 수요·공급 조건에 의해 결정되므로 납부 의무의 변경만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지 않는다.

NoteBase

문 27. 조세의 자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공급이 신축적인 토지에 과세되면, 조세의 자본화가 발생한다.

② 토지에서 조세의 자본화가 발생할 경우, 토지구매자의 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③ 미래 조세에 대한 할인율이 낮을수록 조세의 자본화로 인한 자산 가격의 하락이 커진다.

④ 세율이 높을수록 조세의 자본화 정도는 감소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미래 조세액이 같을 때 **할인율이 낮을수록 조세의 현재가치가 커진다**. 그 부담이 자산 가격에 반영되므로 조세 자본화에 따른 가격 하락 폭도 커진다.

선지별 해설

조세의 자본화는 자산에서 앞으로 부담할 조세가 예상 순수익을 줄여, 그 조세의 현재가치가 현재 자산 가격의 하락에 반영되는 현상이다. 기본 모형에서는 과세로 생기는 가격 하락을 과세 당시의 소유자가 자본손실로 부담한다.

① X: 토지의 조세 자본화를 설명하는 전형적인 조건은 공급이 신축적인 것이 아니라 **공급이 고정되거나 비탄력적**이라는 점이다. 공급을 쉽게 줄여 조세를 회피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동하기 어려우면 미래 순수익 감소가 토지가격에 반영된다. 공급이 신축적이라는 특성을 자본화의 핵심 발생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부적절하다.

② X: 이미 조세가 완전히 자본화된 뒤의 구매자는 미래 조세 부담을 반영한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산다. 이후 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그 부담은 매입가격 하락으로 보상되므로, 동일한 조세의 경제적 부담이 구매자에게 새로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 예기치 않은 과세로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의 소유자가 자본손실을 부담한다.

③ O: 미래 조세액이 같다면 할인율이 낮을수록 그 현재가치가 커지므로 자산 가격의 하락도 커진다. 예를 들어 매년 말 동일한 조세 T를 영구히 부담하고 할인율 r이 일정한 양수라면 조세 현재가치는 $\frac{T}{r}$이다. r이 낮아질수록 이 값이 커져 현재 가격에 반영되는 감소 폭도 확대된다.

④ X: 다른 조건이 같고 세율 상승으로 미래 조세액이 커지면 자본화되는 조세의 현재가치도 커져 가격 하락 폭이 증가한다. 따라서 가격에 반영되는 부담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설명은 반대이다. 세율 상승만으로 자본화 비율 자체가 반드시 달라진다는 뜻과는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문 28. 조세의 초과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의 초과부담은 대체효과로 인해 발생한다.

② 초과부담이 클수록 비효율성계수는 커진다.

③ 세율의 크기와 초과부담의 크기는 관계가 없다.

④ 조세의 초과부담 크기는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커진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다른 조건이 같으면 세율이 높아질수록 상대가격의 왜곡과 거래 감소가 커져 **조세의 초과부담도 커진다**. 작은 세금 변화에 대한 표준적인 근사에서는 초과부담이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두 크기가 무관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선지별 해설

조세의 초과부담은 세금으로 민간의 부담이 정부 수입으로 이전되는 부분을 넘어 발생하는 순후생 손실이다. 조세가 선택을 왜곡하여 원래 가능했던 상호 이익이 있는 거래 등을 줄일 때 나타난다. 아래 비교는 다른 여건이 같다는 전제에서 이해한다.

① O: 조세가 상대가격을 변화시키면 소비·생산·노동 등의 선택이 달라지는 대체효과가 발생한다. **단순한 구매력 감소가 아니라 상대가격 왜곡에 따른 선택 변화**가 초과부담의 원인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낸 세금 전부를 초과부담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O: 비효율성계수는 보통 조세수입에 대한 초과부담의 비율로 나타낸다. 같은 조세수입을 얻는 경우 초과부담이 클수록 계수도 커져 세수 한 단위당 효율성 손실이 크다는 뜻이다. 서로 다른 세수 수준을 비교할 때에는 분모의 변화도 함께 보아야 한다.

③ X: 세율과 초과부담은 관계가 있다. 세금이 커지면 가격 쐐기가 커지고 거래량이 더 줄어들 수 있다. 선형 수요·공급 또는 작은 변화에 대한 표준적 근사에서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세율이 2배이면 초과부담은 약 4배가 된다. 이 관계를 모든 비선형 시장에 정확히 적용되는 등식으로 일반화하지는 않는다.

④ O: 다른 조건이 같으면 수요가 가격 변화에 민감할수록 세금 때문에 거래량이 더 크게 줄어들어 초과부담이 커진다. 엄밀한 후생 분석에서는 **보상수요의 가격 반응**을 기준으로 대체효과를 파악하며, 공급의 가격탄력성도 초과부담에 영향을 준다.

NoteBase

문 29. 조세지출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정부가 징수한 조세를 지출하는 것이므로 소득분배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② 조세지출의 정책 목적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③ 정부의 개입없이 민간부문 자율에 의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④ 명시적인 보조금 정책이 더 유효한 정책수단이 아닌지를 검토해야 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조세지출은 징수한 세금의 직접 지출이 아니라 **비과세·감면 등으로 세입을 포기하는 간접 지원**이다. 소득분배 효과를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이를 이미 징수한 세금의 지출이라고 설명한 전제는 잘못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X: 조세지출은 비과세·감면·공제 등 조세특례로 특정 활동이나 집단을 지원하여 **거둘 수 있었던 세입을 포기하는 방식**이다. 이미 징수한 세금을 예산으로 직접 지출하는 것과 구별되므로, '정부가 징수한 조세를 지출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잘못되었다. 다만 혜택이 어느 계층에 돌아가는지 소득분배 효과를 검토하는 일 자체는 중요하다. ①을 고르는 이유는 분배 효과가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조세지출의 개념을 잘못 설명했기 때문이다.

② O: 특정 활동이나 집단에 세제 혜택을 주려면 그 목적이 사회적으로 정당하고 정책적으로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공익적 효과 없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 높이는 특례라면 **세입 포기에 대한 정당성**이 약해진다.

③ O: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같은 목적을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조세지출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따라서 시장 실패나 지원 필요성이 실제로 있는지, **개입하지 않는 대안**이 더 나은지를 비교해야 한다.

④ O: 조세 감면과 직접 보조금은 같은 정책 목적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의 정확성, 효과의 크기, 재정비용, 행정·준수 비용과 투명성 등을 비교하여 **직접 보조금이 더 효과적인 수단인지** 검토하는 것은 조세지출 정당성 평가에 필요하다.

NoteBase

문 30. 법인세를 소득세와 완전하게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합방식은 법인의 주주를 조합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법인의 이윤을 주주에게 모두 귀속시키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② 자본이득방식에서 사내유보된 이윤은 각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배분하여 소득에 귀속시키고,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간주한다.

③ 자본이득방식은 사내유보된 이윤은 주주의 자본이득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배당금뿐만 아니라 자본이득까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④ 정부가 법인의 선택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가 적절하지 않다. 유보이윤을 주주에게 지분별로 직접 귀속시키는 것은 **조합방식**이다. 자본이득방식은 유보이윤이 주식 가치 상승으로 나타나는 데 주목하여 배당과 자본이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조합방식은 법인을 독립적인 최종 과세 단위로 보지 않고, 법인의 이윤을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된 이윤과 사내유보된 이윤을 모두 주주의 소득으로 보아 개인소득세 체계에서 과세한다.

② (X) 사내유보된 이윤을 주주의 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배분하여 주주의 소득에 포함시키는 설명은 **조합방식**에 해당한다. 자본이득방식은 유보이윤을 이처럼 직접 귀속시키는 대신, 주식 가치 상승으로 나타나는 자본이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 다르다.

③ (O) 자본이득방식은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에 과세하고, 유보된 이윤은 주식 가치의 상승을 통해 주주의 자본이득으로 나타난다고 보아 그 이득에도 과세하는 방식이다. 완전통합의 이론적 취지를 달성하려면 자본이득을 적절히 포착해야 하며, 실현 시점에만 과세하면 과세 이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④ (O) 법인세를 별도로 유지하면 정부가 법인 단계의 세율이나 조세 유인을 통해 투자·재원조달 등 기업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기업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을 중시하면 독립적인 법인세 유지가 유리할 수 있다. 이는 완전통합의 장점만으로 제도 선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NoteBase

문 31. 다음 중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이다.

② 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성격을 갖는다면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③ 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성격을 갖는다면 조세부담은 소유주인 주주에게 귀착된다.

④ 법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정답 1, 2번

①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25%**이다.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gm_Y0gjqf-hgQPrQosP2jk34ghxSQMKn.webp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7hz8ndaoBHfo0AnZMPfHE54dJ5ZNazIx.webp

②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는 이윤극대화 생산량과 가격을 바꾸지 않는다. **자원배분의 왜곡이 없으므로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는 생산량과 가격을 바꾸지 않고 기업의 순이윤만 감소시킨다. 따라서 **다른 경제주체에게 전가되지 않고 이윤의 소유자인 주주에게 귀착**된다.

NoteBase

④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청산소득 등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NoteBase

문 32.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품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품에 적용한다.

② 중간 생산단계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부가가치세 세수가 감소한다.

③ 최종 소비단계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면, 모든 중간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효과가 발생한다.

④ 대상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율을 0% 적용하는 제도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정답은 ②이다. 중간단계만 영세율로 바꾸면 다음 단계의 매입세액 공제가 줄어 그 단계의 납부세액이 늘어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전체 세수는 변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른 부가가치세에서는 수출국의 세부담을 제거하고 수입국에서 국내 소비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한다. 수출품에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적용하면 수출국에서 누적된 세부담을 없앨 수 있어,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중복하여 세금을 부담하는 문제를 방지한다.

② (X) 중간단계에만 영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과세하면, 다음 사업자가 공제할 매입세액도 줄어든다. 그만큼 이후 단계의 납부세액이 늘어나므로 **최종 판매가격과 세율 등 다른 조건이 같으면 전체 세수는 감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세전 판매액이 차례로 100원·200원·300원이고 세율을 10%로 가정하면 정상 과세의 납부세액은 10원·10원·10원으로 합계 30원이다. 중간단계만 영세율이면 10원·-10원·30원이 되어 역시 30원이다. -10원은 매입세액 환급을 뜻한다.

③ (O) 최종 소비단계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마지막 단계의 매출세액은 0이고, 이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된다. 그 결과 **전체 거래단계에 걸쳐 누적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제거**된다. 이는 중간 사업자가 법적으로 모두 면세사업자로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남는 세부담이 없다는 의미이다.

④ (O) 영세율은 **과세대상 거래에 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매출세액은 0이지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는 면세와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문 33. 한 국가의 근로소득세 체계가 다음과 같은 점차누진 구조라고 할 때,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인 사람의 소득세액을 구하면?(단, 공제는 없다고 가정한다.)

<소득구간별 세율>

구간	소득세율
0원-1,000만원	10%
1,000만원 초과-2,000만원	20%
2,000만원 초과-4,000만원	30%
4,000만원 초과-무한대	40%

① 900만원

② 600만원

③ 500만원

④ 400만원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점차누진세는 **소득구간별로 세율을 나누어 적용**한다. 3,000만원을 1,000만원씩 세 구간으로 나누면 세액은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므로 합계는 600만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점차누진세는 총소득 전부에 최고 적용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소득구간에 속하는 부분마다 그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공제가 없으므로 연간 소득 3,000만원을 그대로 구간별로 나눈다.

0원~1,000만원 구간: 첫 1,000만원에는 10%를 적용한다. 세액은 $1{,}000 \times \frac{10}{100} = 100$만원이다.

1,000만원 초과~2,000만원 구간: 다음 1,000만원에는 20%를 적용한다. 세액은 $1{,}000 \times \frac{20}{100} = 200$만원이다.

2,000만원 초과~4,000만원 구간: 실제 소득은 3,000만원이므로 이 구간에 들어가는 금액은 3,000 − 2,000 = 1,000만원이다. 세액은 $1{,}000 \times \frac{30}{100} = 300$만원이다. 구간의 최대 폭인 2,000만원 전체에 과세하지 않는다.

4,000만원 초과 구간: 소득이 이 구간에 도달하지 않으므로 40%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은 0원이다.

총소득세액은 100 + 200 + 300 = 600만원이므로 ②와 일치한다. 전체 3,000만원에 30%를 적용하여 9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점차누진 구조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NoteBase

문 34.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A. Sandmo)의 탈세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탈세행위는 그 사회의 탈세에 대한 인식, 문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②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을수록 탈세행위는 감소한다.

③ 탈세에 대한 벌금률을 높이면 탈세행위는 감소한다.

④ 사람들의 절대위험기피도가 체감한다고 가정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알링햄-샌드모의 기본 모형은 탈세를 **적발 확률과 벌금 등을 고려한 기대효용 극대화 선택**으로 설명한다. 사회적 인식이나 문화를 직접적인 핵심 요인으로 설정하는 설명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기본 모형은 납세자가 적발되지 않았을 때의 이익과 적발되었을 때의 금전적 손실을 비교하여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도록 신고소득을 선택한다고 본다. 사회의 탈세 인식이나 문화 자체를 핵심 설명변수로 설정한 모형은 아니다. 이는 현실에서 문화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기본 모형이 그러한 비금전적 요인을 단순화한다는 뜻이다.

② O: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가 적발될 확률이 높아지면 벌금 등 불리한 결과를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신고소득을 늘리므로 **은닉소득과 탈세가 감소**한다.

③ O: 벌금률이 높아지면 같은 금액을 숨기더라도 적발 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진다. 탈세의 위험 부담이 증가하여 납세자는 신고소득을 늘리고 탈세를 줄인다.

④ O: 모형의 통상적 분석에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절대위험기피도가 낮아진다**고 가정한다. 이는 같은 금액의 위험을 부담하는 데 대한 기피 정도가 소득 증가에 따라 약해진다는 뜻이지, 납세자가 위험중립적이거나 위험애호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35. 공공요금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요금 부과로 인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② 램지가격 설정방식에 따르면, 필수재에 낮은 요율을 부과해야 한다.

③ 램지가격 설정방식에 따르면, 수요가 탄력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낮은 요금,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높은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④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한계비용에 따라 가격을 설정한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가 옳지 않다. 램지 가격의 기본 원칙은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한계비용 대비 가격 가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필수재는 대체로 수요가 비탄력적이므로 낮은 요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설명은 반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이용에 따른 사회적 한계비용을 적절히 반영한 공공요금은 이용자가 자원 사용의 비용을 고려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배분을 유도할 수 있다. 다만 요금을 부과하기만 하면 항상 효율적이라는 뜻은 아니며, 요금 수준과 외부효과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② (X) 램지 가격은 필요한 수입을 확보하면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방식이다. 기본적인 역탄력성 원칙에서는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한계비용 대비 가격 가산율을 높인다. 필수재는 일반적으로 수요가 비탄력적이므로 **필수재라는 이유로 낮은 요율을 부과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이는 저소득층 부담 등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

③ (O) 다른 조건이 같고 교차수요 효과 등을 단순화하면, 수요가 탄력적인 서비스에는 한계비용 대비 낮은 가격 가산율을, 비탄력적인 서비스에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한다. 탄력적인 수요에 큰 가산율을 적용하면 이용량 감소와 후생 손실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낮고 높은 요금은 이러한 가산율의 상대적 차이를 뜻하며, 생산비가 다른 서비스의 절대 가격을 무조건 비교하는 것은 아니다.

④ (O) 규모의 경제로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다. 이때 가격을 한계비용에 맞추면 단위당 수입이 평균비용에 미치지 못하여 총수입이 총비용보다 작아지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비용 회수와 효율성 사이의 공공요금 설정 문제이다.

NoteBase

문 36. 공공요금의 이부가격(two-part tariff)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입비와 사용량에 비례하는 사용료를 함께 부과하는 제도이다.

② 사용료를 한계비용과 동일하게 책정할 수 있으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③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므로 한계비용가격 설정방식과 동일한 소비자잉여가 발생한다.

④ 이부가격 제도는 공공서비스의 고정비용이 크고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널리 이용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정답은 ③이다. 사용료를 한계비용에 맞추더라도 **가입비만큼 순소비자잉여가 줄어든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같다고 소비자에게 남는 잉여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이부가격은 **사용량과 무관한 고정 가입비와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함께 부과하는 방식이다. 가입비를 A, 단위당 사용료를 p, 사용량을 q라 하면 총요금은 $T = A + pq$로 나타낼 수 있다. 요금이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뜻이지, 반드시 두 종류의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긴다는 뜻은 아니다.

② (O) 단위당 사용료를 한계비용과 같게 정하면 이용자는 한계편익이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까지 소비할 수 있다. 가입비로 고정비용을 충당하면서 **추가 사용의 가격은 한계비용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가입비가 너무 높아 이용을 포기하는 사람이 발생하면 가입 여부 측면에서 비효율이 생길 수 있으므로, 효율성은 적절한 가입비 설정 등의 조건 아래 달성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③ (X) 동일한 단위당 사용료와 이용량을 전제하더라도 이부가격에서는 가입비를 추가로 납부한다. 따라서 **가입비를 뺀 순소비자잉여는 가입비 없는 한계비용가격 방식보다 작다.** 가입비 납부 전 소비자잉여가 S라면 가입비 A를 낸 후에는 $S - A$가 남는다. 이용량의 효율성이 같다는 사실과 잉여의 분배가 같다는 사실은 별개이다.

④ (O) 고정비용이 크고 규모의 경제가 있는 공공서비스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 한계비용가격만으로 총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이부가격은 **사용료로 한계적 비용을 반영하고 가입비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 이러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NoteBase

문 37. 국채 및 국가채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미래세대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의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적인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③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한다면 국채발행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한다.

④ 리카도의 대등정리에 의하면 국채발행이 민간소비와 총수요를 증대시킨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미래세대의 소득이 더 높아진다면 일부 재정부담을 미래에 나누는 데 **세대 간 부담능력에 따른 형평성 근거**가 생길 수 있다. 이는 국채 발행의 한 정당화 논거이지, 모든 차입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미래세대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미래세대가 현재세대보다 더 큰 재정부담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때 모든 비용을 현재 조세로 부담시키기보다 국채를 통해 일부 상환 부담을 미래에 나누는 것은 **세대 간 부담능력에 따른 형평성**의 관점에서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미래의 수혜, 이자비용과 채무 지속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소득 증가가 모든 국채 발행을 무조건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② X: 명목 채무액이 고정되어 있고 다른 조건이 같다면 물가 상승은 **국가채무의 실질가치를 감소**시킨다. 명목 채무액을 B, 물가수준을 P라고 하면 실질 채무는 $\frac{B}{P}$이므로 P가 상승할 때 감소한다. 물가연동 채무나 새로운 차입 조건의 변화까지 고려하는 경우와는 구별해야 한다.

③ X: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하면 가계는 국채 발행으로 현재 조세가 줄어든 만큼 미래에 조세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저축과 세대 간 이전을 조정한다. 미래세대에게 상환을 위한 조세가 생길 수 있지만 이를 상쇄하는 자산·유산도 늘어나므로 **국채 발행액만큼 미래세대의 순부담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 국채를 통한 재원조달과 현재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이 가계의 순부에 대해 대등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④ X: 같은 정부지출 경로에서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하면 국채 발행에 따른 현재 감세를 가계가 순부의 증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래 조세를 예상하여 저축을 늘리므로 **민간소비와 총수요를 추가로 늘리지 않는다**. 이 결론은 완전한 자본시장, 미래 조세에 대한 합리적 예상과 세대 간 연결 등 대등정리의 가정 아래의 결과이다.

NoteBase

문 38. 지방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오우츠(W.Oates)의 분권화 정리에 따르면,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② 티부(C.Tiebout) 가설에 따르면,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 feet)에 의해 지방공공재에 대한 선호가 표출된다.

③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지급한다.

④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주요 목적은 수직적 재정 불균형과 수평적 재정 불균형 교정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중앙정부의 교부금 등 이전재원은 지방의 재원 부족을 보충하지만 **자체수입이 아니므로 재정자립도를 직접 높이는 재원은 아니다**. 자체수입 비중을 보는 재정자립도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비중을 보는 재정자주도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지방재정은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공공서비스 공급과 정부 간 재정 격차 조정을 함께 다룬다. 분권화의 효율성에 관한 이론과 재정이전의 목적, 재정지표의 정의를 구별한다.

① O: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는 지역별 선호가 다를 때 지방정부가 공급량을 달리 정하면 중앙정부의 획일적 공급보다 주민의 수요에 잘 맞출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지역 간 외부효과나 중앙 공급의 비용상 이점 등이 없다는 조건**에서의 비교이지, 모든 공공재를 언제나 지방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공급한다는 뜻은 아니다.

② O: 티부 가설에서는 주민이 자신이 원하는 지방공공재와 조세의 조합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선호를 드러낸다. 이를 발에 의한 투표라고 한다. 자유로운 이동과 충분한 정보 등 강한 가정 아래에서 성립하는 설명이다.

③ X: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비중**을 나타낸다. 중앙정부에서 받는 교부금 등의 이전재원은 자체수입이 아니므로, 재원 보충을 곧바로 재정자립도 상승이라고 할 수 없다.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보는 재정자주도와 구별된다. 지방재정이전의 주된 목적은 재원 부족 보전과 재정 격차 조정이다.

④ O: 수직적 재정 불균형은 중앙과 지방 사이의 세입 능력과 지출 책임이 맞지 않는 문제이고, 수평적 재정 불균형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세원·재정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여 필요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한다.

NoteBase

문 39. 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정부가 연성예산제약을 인식하게 되면,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다.

② 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 인식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대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③ 효율적 자본시장은 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 토지시장의 엄격한 규제를 통해 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가 옳지 않다. 연성예산제약을 완화하려면 추가 구제 기대를 줄이고 **재정운용의 결과를 부담하게 하는 시장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 토지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 자체가 이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연성예산제약은 재정이 어려워져도 외부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여 스스로 지출과 차입을 통제할 유인이 약해지는 상태이다. 지방정부가 지출의 이익은 누리면서 비용 일부는 중앙정부 등에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방만한 재정운용이 나타날 수 있다.

② (O) 지방정부가 적자나 채무 문제가 생기면 중앙정부가 지원하거나 구제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연성예산제약의 중요한 원인이다. 모든 정부 간 이전재원이 문제라는 뜻은 아니며, 사후에 부족분을 메워줄 것이라는 기대가 재정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점이 핵심이다.

③ (O) 효율적인 자본시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와 상환 위험이 차입 비용 및 신용 공급에 반영된다. 재정운용이 부실한 정부가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거나 차입에 제약을 받으면, 지출과 채무를 관리하려는 유인이 커져 예산제약을 강화할 수 있다.

④ (X) 이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토지시장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 성과가 시장가격에 반영되는 시장 규율**이다. 공공서비스의 질이나 세부담이 토지·주택 가치에 반영되면 지역 주민은 재정운용의 결과를 자신의 자산 가치로 인식하여 지방정부를 감시할 유인이 생긴다. 엄격한 규제로 이러한 가격 신호와 이동을 약화시키면 연성예산제약을 줄이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NoteBase

문 40. 다음 중 지방세가 아닌 것은?

① 종합부동산세
② 재산세
③ 자동차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정답 1번

①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이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6. 12. 22., 1978. 12. 5., 1981. 12. 31., 1984. 8. 7., 1989. 12. 30., 1993. 12. 31., 1994. 3. 24., 1995. 12. 6., 1996. 12. 30., 1998. 12. 28., 1999. 8. 31., 2000. 12. 29., 2002. 12. 18., 2003. 12. 30., 2005. 1. 5., 2006. 12. 30., 2007. 7. 19., 2007. 12. 31., 2009. 1. 30., 2010. 1. 1., 2010. 3. 31., 2011. 12. 31., 2013. 1. 1., 2018. 12. 31., 2020. 6. 9., 2020. 12. 22., 2021. 12. 21.>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라. 종합부동산세

②

재산세는 **지방세인 보통세**에 해당한다.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재산세

③

자동차세는 **지방세인 보통세**에 해당한다.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자동차세

NoteBase

④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인 목적세**에 해당한다.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NoteBase